



인터넷언론, 설립과 진입요건 강화 시급

한국광고주협회는 지난 9월 15일 광고문화회관에서 한국광고학회, 한국광고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신문 및 인터넷 광고 선진화 방안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인터넷 광고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김병희 교수는 "조사 결과 인터넷언론에서의 광고 강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히며 "인터넷언론사 설립과 진입요건 강화, 사이버언론 위법 행위에 대한 법률 규제 등 제도적 정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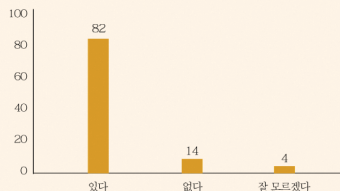
광고주 82% 인터넷언론 광고강요 경험

김병희 교수는 지난 9월 초 상위 100대 광고주를 대상으로 광고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부사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광고주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언론의 광고 강요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2.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표1 참조. 인터넷 뉴스 사이트별로는 독립 인터넷신문(42.0%), 기타 인터넷신문(30.0%), 신문사 종속 인터넷신문(22.0%) 등의 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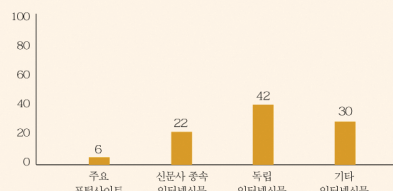
로 광고 강요가 잦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2 참조.

인터넷광고 거래 관행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0%가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세부적으로 심각한 항목에 대해 질문한 결과, 광고 및 협찬 거부시 허위 및 음해성 보도(5.48), 왜곡, 과장, 선정적인 기사로 광고 강요(5.42), 기사를 써주고 나서 광고 게재 권유(5.26), 인맥에 의한 영업방식(5.12), 행사에 대한 협찬 강요(4.88) 등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표3 참조.

<표1> 인터넷 광고 강요받은 경험



<표2> 인터넷 뉴스 이용사이트 중 거래 관행 폐해가 가장 큰 곳



<표 3> 인터넷광고 거래 관행의 폐해나 문제점

	Mean
왜곡, 과장, 선정적인 기사로 광고 강요	5.42
광고 및 협찬 거부시 허위 및 음해성 보도	5.48
광고를 먼저 게재하고 나중에 요금 청구	3.82
행사에 대한 협찬 강요	4.88
객관적 근거 없는 주관적 광고단가 책정	4.78
완전없는 광고비 할인이나 할증	4.62
기사를 써주고 나서 광고 게재 권유	5.26
인맥에 의존하는 영업방식	5.12

이런 인터넷언론의 광고 강요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인터넷 매체의 부실한 재정상태(6.30), 인터넷 매체의 과도한 난립(6.28), 인터넷 매체사 사주의 비윤리적 경영(6.22), 구시대적인 거래관행의 지속(6.06), 인터넷 신문기자의 윤리의식 결핍(5.88) 등을 지적하였다.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 등 제도 정비 시급

인터넷언론의 광고 강요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서는 인터넷언론사 설립과 진입요건의 강화(6.58),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의 강화(6.54), 사이버언론의 위법 행위를 법률로 규제(6.50), 업계 공동의 대응책 마련(6.06), 인터넷언론사의 과도한 난립에 대한 구조조정(6.00),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5.90) 등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꼽았다. 표4 참조.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표 4> 인터넷신문의 광고 강요 해소 방안

	Mean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 대응	5.90
인터넷언론사의 과도한 난립에 대한 구조조정	6.00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의 강화(필적제2, 편집1명)	6.54
인터넷언론사 설립과 진입요건의 강화	6.58
사이버 인터넷언론사나 언론인의 자율정화 촉구	5.84
사이버 인터넷언론의 위법 행위를 관련법률 규제	6.50
한국광고주협회나 업계 공동의 대응방안 마련	6.06
인터넷광고의 합리적인 요금체계 마련	5.28
인터넷신문에도 ABC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준비	5.62
사이버언론의 광고 강요에 적극적 거부	5.96
인터넷언론사에 광고 윤리강령 제정 촉구	5.90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신고하여 피해구제 요청	5.14
한간자율규제기관(고충처리위원회) 설립	5.20
매월 사이버 언론의 광고 강요 사례 발표	5.96

에 따르면,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하면 인터넷신문으로 해당 시도에 등록할 수 있다.

김 교수는 "규모가 작은 인터넷신문의 폐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정상태가 부실한 인터넷신문이 과도하게 난립하고 있어 이들의 위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률을 정비하는 한편 인터넷언론사 설립과 진입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지 기자 susie@kaa.or.kr